

현대《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파국적후과

박사 부교수 정 광 수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자유주의론〉을 떠벌이는 제국주의어용학자들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은폐된 형태로 옹호하여나서게 된것은 국가의 〈조절적시책〉을 정면으로 찬양해나설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되어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65페이지)

현대《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는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세계자본주의나라들에서 1970년대말부터 급속히 류포되었다.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조절적 자본주의론》을 받아들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1960년대말부터 침체인플레이와 저성장, 1974년—1975년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부터 《조절적자본주의론》을 대신하는 리론으로서 경제정책에 도입되었다.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나라의 경제정책에 반영하는것을 《신자유주의》화라고 할수 있다. 《신자유주의》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일정한 력사적배경에서 명백한 의사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화과정을 분석하자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그것이 추진되었는가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기부터 21세기초에 걸쳐 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해온 부르쵸아사상조류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적본질은 세계화된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기술과 관련된 금융의 자유화, 생산류통과정의 효율화에 의하여 다국적기업, 다국적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에 의한 노동자, 농민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강화, 자본축적의 방도를 제공하는 원리라는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적특징은 시장관리, 리윤관리, 경쟁원리를 경제정책을 비롯한 사회의 각 분야에 강요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의 《활력》을 발휘하게 하자는것이다.

《신자유주의》화가 본격적으로 급속히 전개된것은 1970년대말부터이다. 그러나 1970년대초시기부터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된 나라들이 있는것만큼 1970년대에 들어선 시기의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화를 촉진시킨 직접적인 배경은 1960년대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침체인플레이이다. 침체인플레이는 그때까지 경제리론상에 상정되지 않았던 실업하에서의 물가상승이 일어남으로써 통화주의자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조절적자본주의론》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화는 역사적단계에 대응한 자본축적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29년-1933년공황이후 자본주의경제에서 주류를 이루게 된 《조절적자본주의론》에 기초한 국가간섭주의적경제운영이 경제규모가 계속 커가던 1960년대 고도성장기까지는 잘 기능하여 자본축적을 적극 안받침하였으나 1970년대이후는 그 방식으로서의 자본축적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저성장기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화는 저성장기에 들어선 경제상태에서 대자본가를 비롯한 일부 부유층의 축적을 보장강화할것을 목적으로 1970년대이후에 적극 도입추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이후 저성장기에 대응한 자본축적체제구축을 위하여 파급되어간 《신자유주의》화는 그 필연적산물로서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부유층은 부활되었으며 경제의 《금융화》의 혜택을 입으면서 부를 가일층 집중하였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금융화》의 혜택을 크게 입고 성장하는 부유층들을 위한 체제구축을 위하여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화는 대자본과 부유층들을 위하여 은폐된 형태로 국가의 간섭이 진행되도록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신자유주의》화는 크게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외적인 압력에 의한 《신자유주의》화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칠레와 아르헨티나이다. 《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 기초한 경제의 《신자유주의》화가 제일 먼저 실험적으로 도입된 나라는 중남아메리카의 칠레와 아르헨티나이다.

둘째 유형은 국내요인에 의한 《신자유주의》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조절적자본주의론》을 강력하게 추진한 영국 등에서 전반적으로 자본축적이 난관에 직면하는 속에서 대자본가들과 부유층들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수탈을 통한 자본축적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추진된것을 가리킨다.

셋째 유형은 외적압력과 내적요인의 혼합형태로서의 《신자유주의》화이다. 세계자본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 등에서 촉진된 《신자유주의》화영향은 주변 자본주의 나라들과 예측적인 신흥경제국들에게 전파되었다. 그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를 리용하여 급격히 진행되었다.

오늘 세계적범위에서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도입은 파국적후과를 빚어내고있다.

2. 본론

2.1.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하에서 빚어진 자본주의세계전반의 경제적모순과의 연관속에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복합적인 이중적성격과 그 모순에 기초하였다.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위기의 이중적성격은 그것이 폭발적인 금융거래에 의한 독자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자체로부터 초래되는 공황의 한 형태인 금융위기가 엉킨 복합적인것이라는데 있다. 이 이중적성격은 1980년대부터 실시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하여 루적된 세계경제의 복합적인 이중적성격과 그 모순이 그대로 폭발한것이다. 이로부터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금융위기로 되었다.

우선 다국적기업, 거대금융자본에 의한 자본축적의 강행 즉 폭발적인 금융거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폭발적인 금융거래는 《신자유주의》금융리론에 의거한 《금융모델》이 발전하고 거대한 금융기관,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위험회피기금-자산의 형성과 회전), 거대복합금융기관(은행, 보험결합-신탁업) 등이 온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주기적인 환자조작(투자놀이, 돈굴림)을 전개하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은 실물경제자체에도 있다.

1974년-1975년 세계공황으로부터 30여년간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거대금융자본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축적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감세, 반인플레이, 정부규제철폐, 사회적지출삭감 등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따르는 실물경제에서의 현실자본의 축적과 결합된 화폐자본의 축적을 이룩하여왔다.

이 두 측면 즉 폭발적인 금융거래에 의한 화폐자본의 축적과 실물경제에서의 현실자본의 축적과 결합된 화폐자본의 축적이라는 두 측면에서 루적된 모순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은 《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 기초하여 강화된 다국적기업의 자본축적방법, 부와 빈곤을 루적시킨 착취적인 자본축적의 방법, 파잉화폐자본을 투기적인 화폐로 하여 부단히 자본을 루적시키는 방법에 있다. 폭발적인 금융거래는 세계적규모에서 다국적기업화된 거대독점기업들의 착취와 자본축적의 방법을 촉진 강화시켰으며 세계경제위기를 빚어냈다.

둘째로,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축적의 이중적구조와 련관되어있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 세계적범위에서의 재생산의 국제적결합에 의한 자본축적과 함께 매개 나라내부의 재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자본축적이라는 이중적구조를 형성하였다.

우선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자본축적의 흐름에 의하여 재생산의 국제적인 결합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말부터 2000년대 전반기 《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 의한 시장개방, 시장만능주의의 경제정책을 세계에 넓혀 기축통화인 달러의 특권에 의거하여 한 나라에 자금이 집중되었으며 달러와 주가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었다.

한 나라에 세계의 자금이 다량 류입되어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 의제자본의 가격이 높아지고 거품경제에 따르는 거품경기가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한 나라의 팽대한 소비시장이 아시아나라들의 수출대상지로 되고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시아에 수출주도의 자본축적을 가져옴으로써 국제적으로 서로 결합된 재생산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한 나라를 축으로 하는 국제적인 자본축적, 재생산의 결합속에서 매개 나라 내부의 자본축적 즉 재생산의 구조가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는 정보기술을 리용한 대기업중심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일방에서는 방대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른쪽에서는 방대한 《일하는 빈곤층》과 실업이 루적되었다. 《신자유주의》로동정책에 의하여 로동법규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비정규직로동자가 대량적으로 생겨났다. 정규, 비정규를 불문하고 정보기술에 의하여 로동의 효률화와 로동강도의 강화가 추진되었으며 그것이 로동자들속에도 파급되어 《일하는 빈곤층》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시장원리가 사회보장제에도 적용되고 세금, 재정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기능

도 허물어졌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루적되고 새로운 공황의 조건이 형성되었다.

결국 2007년 여름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저소득자용주택대부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세계자본주의는 1974년-1975년공황이래 루적된 모순이 세계공황형태로 분출되는 전야에 있게 되었다.

셋째로,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기축통화, 딸라체계의 역할과 그 한계와의 연관 즉 현실자본과 화폐자본의 축적과 모순의 확대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세계경제위기가 금융위기형태로 시작되게 된 원인은 기축통화, 딸라체계하에서의 폭발적인 금융거래에 있다.

세계적인 자본축적의 이중구조는 어느것이냐 다 기축통화, 딸라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때문에 딸라기축통화체계하에서는 금과 딸라교환의 정지→변동시세체제로의 이행→불태환은행권인 딸라의 대량류출→통화투기의 활성화→세계의 카지노자본주의화→딸라시세폭락의 우려 순서로 모순이 확대되어갔다.

현실자본의 축적은 딸라기축통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기술에 의한 착취적인 자본축적의 확대→사회적부가 한줌도 안되는 대기업, 대은행, 대부호에로의 집중 →한편으로 자산운용회사 등의 투기적인 자금의 증대→다른편으로는 《일하는 빈곤층》에 의한 소비의 제한→신용팽창→신용팽창의 한계→신용거품의 파탄→투자와 소비의 급속한 축감→세계경제위기를 가져왔다.

한편 화폐자본, 의제자본의 축적은 딸라기축통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인 금융리론→금융의 자유화,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간섭의 배제→정보기술에 의한 금융공학의 발전→거대복합금융기관들에 의한 금융증권화, 파생금융상품, 신용거래, 장부의 거래의 급격한 팽창(신용팽창), 다른 나라들에 널려져있는 유흥딸라의 본국에로의 환류→저소득자주택대부관련증권화상품의 불량채권화→세계금융기관의 경영위기→신용파생상품의 불량채권화→《금융모델》의 파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넷째로,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1974년-1975년 세계공황후의 본격적이며 파국적인 세계경제위기이다.

우선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정보기술, 다국적기업화에 의한 생산과 자본의 집적, 집종의 새로운 단계하에서의 위기이다.

정보기술은 생산수단과 교통, 정보통신수단, 거대독점체들의 경영방법 등에서 변혁을 가져왔다. 생산과 류통의 철저한 효율화, 가속화가 실현되고 생산과 정보의 고속화에 대응한 고용의 류동화와 다양화가 이룩되었으며 낭비를 극력 없앤 고용의 삭감이 강행추진되었다. 종전보다도 더 대규모로 산업의 개편, 합리화를 진행하고 기업의 합병과 매수를 강행하여 생산과 자본의 집중, 집적을 촉진시키면서 자본의 착취와 수탈방법을 더욱 악랄하게 강화하였다.

또한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 금융비대화에 의하여 경기순환의 면모가 달라진 환경에서의 위기이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 계속되면 경기순환에서 구조적변화가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종래의 《케인즈주의》적경기순환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경기순환으로 전화된다. 《신자유주의》적경기순환이란 금융자산가격의 변화에 따라 소비, 투자의 류동고지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순환을 말한다.

《케인즈주의》적경기순환에서는 실물경제의 유효수요동향이 경기순환의 주요지표로

되고 내적인 수요확대를 위하여 개인의 소비(소득)나 투자를 촉진하는것이 자극책의 중심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금융자산이란 채무증서의 소유자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서는 금융의 자유화가 철저히 추진되고 실물경제에 비한 금융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 금융이 비대해지고 금융의 움직임이 경기동향을 결정하는 중심적요인으로 되고있다.

또한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재생산의 국제적련계하에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세계적인 위기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산의 국제적결합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럽동맹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결합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보장되고있으며 아시아에서의 국제적재생산의 련계는 다국적기업의 자본축적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의 이러한 특징들로 하여 당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대책에 대한 논의는 난관에 직면하였다.

레이만 브라더즈(2008년 9월 15일에 파산된 미국의 네번째 큰 투자은행)충격이후 자본주의 각국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대응책으로서 국가신용이나 국가재정을 마구 확대하는 《케인즈주의》의 전면부활을 가져왔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리론을 버리고 《초대정부》리론을 전개한 셈이다. 아무런 리론적분석도 없이 《케인즈주의》의 재생이 눈에 띄우게 나타났다. 이 시기 금융위기의 특징은 정부나 중앙은행이면 다 국가지원예로 나가게 된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거부, 《케인즈주의》의 재생, 부활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현실은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가 1974년-1975년 세계공황이후 실시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하여 루적된 세계경제의 근원적인 모순들의 필연적산물이며 자본주의에 고유한 불치의 병이라는것을 보여준다.

2.2. 2010년이후 초래된 경제적모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를 거쳐 2010년이후에는 여러가지 경제적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 12월에 일본은 그러한 모순들에 대한 미봉책을 구사하여 가일층 진화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펴나갔다. 일명 《아베의 경제정책》으로 불리우는 아베정권하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 그 실시결과 일본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아베의 경제정책》을 시작한 첫해인 2013년도에 2%장성을 기록한 후 2014년도에는 미누스장성(-1.0%)을 기록하였다. 4분기장성률만 보아도 2013년 1~3월기간부터 확정값이 발표된 2015년 7~9월기간까지 11번중 1번의 련속 미누스장성을 포함하여 앞선 기간에 비한 미누스장성은 4번 존재하였다. 경제정책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강조하고 선전하는 아베정권하에서 일본경제는 결코 순탄한 장성궤도를 걷지 못하고 오히려 심한 모순을 안고있었다. 이 모순들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2.2.1. 고용의 증가와 소비의 침체사이의 모순

《아베의 경제정책》실시후 일본에서 고용자수는 경향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가계최종소비는 그에 상응되게 상승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면 고용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가를 두가지로 말할수 있다.

첫째로, 고용은 량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열화되어있다는것이다. 즉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고용자가 불어나는 경향이 있다는것이다. 둘째로, 고용형태의 변화가 로동시간에 영향을 주어 단시간로동자가 불어남으로써 평균로동시간이 감소하고있는것이다. 평균로동시간은 세계경제위기이전에 비하여 5%가까이 감소하였다.

결국 고용자수의 증가정도와 로동시간의 단축정도가 비슷하다면 사회적인 로동투입량은 크게 변함이 없는것으로 된다. 즉 고용은 증가하여도 큰 범위에서 볼 때 효과가 크지 않을수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고용이 증가한다는 과거의 경기회복징조가 경기회복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된 구조를 가지게 된것, 이것이 오늘의 일본경제가 안고있는 첫째 모순이라고 할수 있다.

2.2.2. 경제저장성과 대기업을의 최고리익달성사이의 모순

일본경제의 모순은 경제전반이 저장성, 침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과거 최고액을 달성하고있는것이다. 1990년대이후 경제성장은 1%전후로 변화되고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잠재적인 GDP장성률은 0.5%에 미치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즉 저장성은 고착되어있다는것이다.

그러나 2014년의 결과는 일본의 경제장성률은 미누스인데 대기업의 경상리익은 +를 기록하고있다. 즉 대기업과 일본경제사이에 분리가 생기고있다는것이다.

첫째로, 대기업의 리익원천이 국내경제와 분리되어있다는것 둘째로, 대기업의 리익배분이 국내경제와 분리되어있다는것 셋째로, 축적된 대기업의 리익이 국내경제와 분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저장성아래서 대기업이 과거최고의 경상리익을 달성하고있는것은 국내경제와 대기업의 세가지 분리(수익구조, 리익의 배분, 축적)를 초래시키며 이것은 아무리 대기업이 장성해도 일본경제에는 한정적인 영향밖에 줄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아베의 경제정책》에서 상정되고있는 낙관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다시말하여 경제회복의 회로가 차단되어있다는것이다.

2.2.3. 량적, 질적금융완화와 재정정책사이의 모순

일본경제가 안고있는 모순은 《아베의 경제정책》 그자체와 관련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량적, 질적금융완화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량적, 질적금융완화는 2013년 3월에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 구로다 하루히코가 데플레극복을 위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금융완화와 그후 실시한 추가적금융완화들을 통털어 가리킨다.

문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것, 재정정책을 금지한다는것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다시말하여 량적, 질적금융완화의 결과 불어날대로 불어난 일본은행의 보유국채때문에 출구정책을 찾는것도 어렵다는것이다.

량적, 질적금융완화에서 벗어나자면 증가할대로 증가한 일본은행보유국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시장에서 처리하자면 그 가격폭락을 면치 못한다. 국채가격의 폭락은 장기금리의 상승을 나타낸다. 따라서 출구정책에 의한 국채가격의 폭락은 일본은행의 재정상태를 심히 손상시키며 다른 편에서 정부의 금리지불부담을 증폭시

켜 경제에 심한 타격을 준다.

결국 양적, 질적금융완화정책은 재정정책을 금지하여 금융정책에만 편중되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되지 않을수 없게 하며 효과가 크지 않는데도 출구정책으로 넘어갈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할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이것은 모두 일본경제의 호전이 구조적으로 막히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실시와 그로 인한 모순은 경제구조를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전면적으로 붕괴될수밖에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것이다.

2.3. 현대《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한 현실대

《신자유주의》는 《조절적자본주의론》의 부정을 통하여 저들의 주장을 구축하였다. 그것은 단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것에 집약되어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조절적자본주의》는 정부가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통하여 시장기구가 자유로운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장성의 조건을 파괴하는것이 《큰 정부》였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제한된 간섭밑에 정부지출의 감소,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작용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장성을 이룩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현시기 자본주의세계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위기를 가져왔다.

첫째로, 정부지출의 감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의 감소를 지향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출내용이 변한것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서 말하는 지출삭감이란 사회보장비를 비롯한 《복지국가》적지출의 삭감을 의미하는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실시초기부터 발로된것이지만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결과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 더욱 로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재정수지가 적자이다. 2008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일련의 나라들은 적자규모를 2007년에 비하여 2배부터 3배로 증가시켰다. 이것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였다는것이며 그 대부분이 거의 대기업구제에 할당되었다는데 그 반동적성격이 있다. 즉 은폐된 형태로 독점자본을 지원하는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직면한 순간부터 로골적인 지원을 한다는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을 줄일수 없다는것이다.

둘째로, 감세의 효과가 없는것이다.

1974년에 워싱턴의 어느 식당에서 잡담을 하는 중에 생겼다고 하는 《라파곡선(Laffer curve)》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감세를 설명할 때 리용하는 논리이다. 즉 일정한 단계까지의 세율향상은 세입을 증가시키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갈수록 세입은 줄어들어 세율이 100%가 되면 세입은 0으로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율은 세입이 최대화되는 수준이하로 해야 하며 만일 현재 세율이 세입을 최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고있다면 최대화수준까지 감세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감세를 통한 재정재건을 주장하는것이다.

이 논리에 따른 1981년의 조세개혁(1981년경제재건조세법)은 충분한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하면서 재정적자를 급증시켜 실패로 끝났다. 여러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세소득의

탄력성증 로동공급의 탄력성은 아주 작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있다. 즉 세률을 높이거나 낮추어도 로동공급에는 차이가 없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감세를 통한 재정재건이 허구로 끝난 결과 과세중립주의를 내걸어 부유층의 감세를 빈곤층에로의 과세확대로 충당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 레컨대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이는것은 그 대표적인 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는 세입의 감소는 대처할수 있으나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를 루적할수밖에 없다.

결국 감세는 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을 늘인 반면에 중간층을 해체하여 빈곤층을 증가시키는 결과 즉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였다. 부유층우대에 대한 불만을 회피해보려고 주장한 《락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주장된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세계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있는 궤변중의 궤변이다.

셋째로, 빈곤의 만연과 격차가 확대된것이다.

감세뿐만아니라 규제완화도 빈곤의 만연과 격차의 확대를 조장하였다.

자본축적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조건에서 대자본들의 자본축적을 은폐된 형태로 안반침하는 《신자유주의》는 각종 규제를 기업에 유리하게 완화해주었다. 경제규모가 더는 확대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기업이 축적을 더 하자면 남이 가지는 부를 약탈하면서라도 축적할수밖에 없다. 그를 위하여 기업들은 우선 로동자들을 가일층 착취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류동비화하였다. 그것은 고용하는 로동자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할것이 아니라 파견형태나 비정규직원으로 충당하는것이다. 이것은 로동자측에서 보면 고용의 불안정화와 소득감소의 축진이며 그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로조가 파괴, 약화된 조건하에서 이러한 처지에 시달리는 로동자들은 저들의 처지를 개선유지할만 한 방도를 가지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굳어지고있다. 이것은 만성적인 소비부족을 낳으며 경제장성을 억제하고있다.

한편 규제완화는 소비부족이라는 국내의 조건하에서 외국에서의 자본축적에서 살길을 찾도록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결과 기업들은 저들의 리익을 위하여 조건이 더 유리한 외국에서 로동자들을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생산된 상품을 외국에서 판매하여 리익을 얻는 구조를 갖추어나가고있다. 국내경제와 대기업의 괴이한 분리가 심히 축진되어 국내격차확대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넷째로, 금융을 통한 자본축적이 어려움에 직면한것이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 실시한 규제완화는 물질적인 상품생산을 통한 자본축적이 더는 리익을 확대 못하는 조건하에서 금융을 통한 자본축적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없앴으며 오늘은 경제의 《금융화》를 거의 실현시켜놓았다.

경제의 《금융화》란 금융부문의 심화 즉 가계, 기업, 정부의 3대부문에서 금융의 중심적역할이 확인되는것과 같은 경제전반의 구조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국경을 벗어난 금융활동의 거대화로서 나타난다. 레컨대 실체경제의 규모를 나타내는 GDP규모에 비한 금융자산의 규모는 1970년대에 거의 비슷한 규모였던것이 현재 약 4배까지 확대되어있다. 2013년말 주식, 채권, 은행예금의 세계적인 합계는 2 865 847억US\$인것에 비해 세계GDP합계는 754 709억US\$였다. 1998년의 외환거래의 하루평균액수는 1.5조US\$로부터 2013년에는 5.3조US\$로 증대하였다. 이 규모는 같은 해(2013년)의 연간세계무역액수가 18조US\$라는것을 고려할 때 연간무역총액을 불과 4일동안의 거래로 충당할수 있는

규모이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결과 경제의 《금융화》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금융이 자본축적의 기본수단으로 되었다. 다만 금융을 통한 자본축적이 물질적상품생산을 통한 자본축적과 대비하여볼 때 비할바없이 불안정하다는것이다.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는 이미 금융을 통한 자본축적의 길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사변이다. 즉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전면적위기의 시작으로 볼수 있다.

다섯째로, 금융정책이 효과적일수 없다는것이다.

《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주류를 이루는 프리드먼에 의하여 대표되는 《통화주의》, 《통화론적신자유주의》는 대량적인 재정지출이나 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을 부정한다. 그들은 총수요관리정책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정책의 보임차》와 인플레이기대심리를 드는데 특히 인플레이기대심리가 정책효과를 없애는 근본요인이라고 보았다.

인플레이기대심리란 인플레이의 변동을 예상하고 자신의 경제행위를 스스로 조정하는것을 말한다. 레컨대 정부가 국채발행의 금리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늘여 저금리정책을 실시한다고 할 때 통화량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명목금리도 저하되어 정책효과가 있을수 있으나 통화량증가는 인플레이를 심화시킬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뚜렷해짐에 따라 명목금리는 인상될수밖에 없다. 결국 저금리정책은 인플레이와 명목금리의 상승이라는 경제악화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케인즈주의》자들은 금리수준보다 실업을 줄이는 정책으로 저금리정책을 리해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화량증가가 물가상승을 초래시키는데 기업은 그것을 재빨리 인식하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기업보다 늦게 인식하기 마련이므로 물가상승을 넘두에 둔 명목임금인상을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인상으로 착각하여 취업을 하자고 한다는것이다. 즉 실업이 축소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플레이를 노동자들도 인식하게 되면 명목임금상승을 요구하거나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실업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업수준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정책을 실시하든 사회의 실업률은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로 수렴된다고 하였다. 즉 인플레이기대심리는 총수요관리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통화주의자들은 금융정책은 인플레이를 낳는것이며 따라서 재량에 따라 실시할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는 1979년부터 통화주의에 기초한 금융정책을 도입하여 인플레이를 극복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면에 공황의 가일층의 심각화를 초래시켰으며 영국은 1986년부터 정책을 수정하였다.

최근 일본에서 실시하는 금융정책을 보면 그들이 리론적근거로 삼던 인플레이기대심리 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나고있다.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결과 격차구조가 고착, 확대되어 사회의 수요부족을 만성화시키고있으며 이것은 사회에 데플레공황의 장기화를 초래시켰다. 그리하여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 해마다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70조원에 달하는 기초통화량(예금과 현금의 합)의 장성을 약속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규모를 80조원까지 확대하였다. 그렇게 하여 인플레이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결과는 전혀 기대되지 않고있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 의거하는 금융정책이 더는 효과적일수 없을뿐아니라 정책변경도 어렵다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있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한 전면적위기는 5가지의 사회경제적인 내용이외에도 사회전반에 미치고있다. 지나친 개인주의의 조장이 교육이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고있으며

인간적인 편계를 단절하고 범죄와 불의를 범람하게 한다. 아무리 자본축적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하여도 더는 《신자유주의》로써는 사회자체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3. 결 론

부르조아경제학자들과 제국주의반동들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극도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어용리론들을 조작해내어 경제정책에 도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경제위기를 없애고 날을 따라 침예화되는 사회경제적모순들을 《완화》시킬수 있으며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룩할수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여러가지 반동적인 궤변들을 조작하고 도입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는 그자체가 안고있는 구조적취약성으로 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속에서 파산과 몰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는 그 어떤 경제정책을 도입하든 경제위기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날로 격화되는 위기와 모순으로 하여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배격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옹호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신자유주의, 침체인플레이, 금융의 자유화